

증시 '블랙먼데이'

폭락장 어디까지 가나

글로벌 일시 악재... "단기간내 제자리 잡는다"

1,840~1,900선 조정... 과민반응보다 저점 매수 기회로

일부선 "美 경기침체 상처 크다" 1,800선 이탈 우려도

'블랙먼데이' 20주년의 여파로 22일 국내 증시에도 블랙먼데이가 빚어지자 하락 지속여부를 놓고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하락이 단기에 그칠 것이며 60일 이동평균선 근처인 지수 1,890선 안팎에서 1차 지지를 받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이런 주장과 달리 일부 전문가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재연된 것인 만큼 펀더멘털이 훼손될 수도 있다면서 지수 1,800선을 밑돌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미국 증권 조재훈 투자분석부장은 "국제 유가 급등과 미 달러화 약세 등 경기 불안에 따른 미국 주식시장 하락

▲블랙먼데이는 1987년 10월 19일 월요일 미국 뉴욕 증권시장에서 일어났던 주가 대폭락 사건. 뉴욕 증가는 이날 하루에만 508포인트, 비율로는 전일 대비 22.6%나 폭락했다.

▲코스피·다우존스 지수 추이. 코스피 지수는 2007.10.4 13974.31, 2007.10.9 14164.53, 2007.10.11 14015.12, 2007.10.17 13892.54, 2007.10.18 13888.96, 2007.10.19 13522.02, 2007.10.22 1903.81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기간 조정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며 "급락세를 이어갈 경우 코스피지수 1,850선이 깨질 수도 있지만 60일 이동평균선인 1,890를 밑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성장 추세가 훼손된 것이 아니라 전에서 투매에 가담하기 보다는 1,900선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정 길어질 수도"=반면 미 경기침체가 불려 올 상처가 예상보다 아플 것이라는 진단도 만만치 않다. 교보증권 이종우 리서치 센터장은 "국내의 증시 상황이 우호적이지 않아

당분간 약세를 면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지난 8월에는 단기간에 급락했지만 이번에는 시장이 서서히 힘을 잃어가는 형국으로 코스피 1차 지지선은 1,800선, 2차 지지선은 1,650선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학원사업 매년 증가 年 수입 6조 육박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서비스업종(학원) 사업자와 이들의 수입액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원 사업자 수는 2002년 6만6천715명에서 2003년 7만1천76명, 2004년 7만2천496명, 2005년 7만8천917명 등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9만1천4명에 달했다.

학원 사업자가 신고한 수입액은 2002년 3조5천698억원에서 2003년 3조9천364억원, 2004년 4조1천762억원, 2005년 4조8천385억원 등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5조8천192억원으로 6조원에 육박했다.

국세청 국가 자료에는 학습지 회사와 소규모 학원, 개인교의 등은 제외돼 사교육 시장 규모는 이 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사교육 시장이 급증함에 따라 학원에 대한 세원 파악을 위해 신용카드 가맹과 현금영수증제도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중유통 캔 가공식품 유통기한 표시 허용

시중 유통중인 캔 가공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매니큐어를 지우는데 사용하는 아세톤으로도 쉽게 지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공식품의 유통기한은 손으로 문지르거나, 냉동·냉동보관 중 물에 지워지거나 햇빛 등에 의해 탈색되는 등의 사유로 지워지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는 잉크나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해야 한다.

또 이를 어길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품목제조정지 15일, 3차 품목제조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캔 최고 제품과 국내 유명 식품회사의 20개 캔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아세톤으로 지워본 결과 모두 흔적없이 깨끗이 지워졌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일정 유통기한을 두고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유통기한을 표시하거나 '양자 처리'를 의무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발유값 l당 1,800원 육박.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면서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가운데 22일 서울 여의도 한 주유소의 후발유 가격이 1천700원대 후반을 넘어서 있다.

금융감독기관 퇴직자 낙하산 제한

금융당국 '세계 10대 금융강국 도약 로드맵'

'문지마' 판매 대신 '맞춤상품' 권유 자율성 중시... 실현 여부는 미지수

금융감독당국이 22일 제시한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은 세계 10대 금융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이들이 좀 더 친화적인 감독정책을 구사하는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며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권의 보호는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로드맵의 골자는 '규정' 중심의 감독을 '원칙' 중심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행동하기 전에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말고' 식의 규제가 아니라 대원칙을 정해준 후 나머지에 대해선 자율성을 준다는 의미다. 업무 범위와 상품개발과 관련된 규제를 철폐하고 심사절차 등을 간소화시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회사의 내부통제제의 적정성과 이행 여부 등 시스템을 살펴볼 때 시스템의 운용 내용은 사사건건 간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관행적인 종합·현장검사 중심 감독에서 리스크 중심의 부문·서면검사로 전환도 모색한다.

금융당국의 이번 로드맵은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는 되레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회사에 대해 소비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최적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최적권유제도를 도입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이번 로드맵 내용에 대부분 긍정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우선 올해 대신이 끝나고 내년 초 증권이 교체되면 이전 증권에서 만들어진 로드맵을 얼마나 존중할 지에 대한 의구심이다. 또 다음 증권이 틀어질 경우 3년 임기의 금융감독위원장의 교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들고 있다.

공무원 성과연봉 격차 2배로 는다

내년·무능 도태... 내년부터 최대 1,400만원 차

내년에는 공무원들의 연봉이 능력과 업적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무원단의 성과연봉 비중이 올해 5%에서 내년에는 10%로 뛰고 4급 이하 공무원들의 지급기준액 대비 상여 성과급의 평균비율도 올해 100%에서 내년에는 131%로 급상승하기 때문이다.

올해 고위공무원단의 성과연봉은 ▲S 등급 711만원 ▲A등급 474만원 ▲B등급 237만원 ▲C등급 0원 등으로 최대 격차가 711만원이다. 내년엔 성과연봉 비중이 2배로 뛰는 만큼 성과연봉 격차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무원단의 평균연봉이 7천만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과연봉 1천400만원의 격차는 작은 규모가 아니라 것이 중앙인사위의 설명이다. 4급 이하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 격

증장기 주택종합계획 수정

상한제·미분양 등 시장변화 반영키로

2004년 초 수립됐던 증장기 주택종합계획이 처음 수정된다.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 부동산 정책의 변경과 이에 따라 예상되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까지 고려된다.

건설교통부는 2003~2004년 수립한 연평균 50만가구, 총 50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증장기 주택종합계획을 수정하는 작업에 최근 착수,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증장기 주택종합계획은 주택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며 2003년~2012년 종합계획은 2003년 준비를 거쳐 2004년 초에 확정, 발표됐다. 정부는 이 증장기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초에 당해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해 발표해왔다.

2012년까지의 증장기 주택종합계획은 아직까지 한번도 수정되지 않았으며 이번 수정작업에서는 그동안 이뤄진 각종 제도의 변경과 이에 따라 예상되는 부동산시장의 변화 등이 반영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통계청이 5년단위로 발표하는 인구센서스가 2005년에 발표된 것을 포함해 그동안 나온 각종 통계자료를 반영할 것"이라며 "3·30대책, 8·31대책, 1·11대책 등 증장기 계획 수립 이후의 제도변화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 對北투자 신고절차 간소화

30만달러 이하 사업실적보고서 면제

앞으로 소액 대북투자자에 대한 각종 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등 대북투자 신고절차가 간소화되고 대북투자 정보도 수출입은행이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금액이 30만달러 이하인 대북투자자는 연간 사업실적보고서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100만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약식으로 보고할 수 있다. 종전에는 모든 대북투자자들이 연간 사업실적보고서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돼 지침 개정으로 대북투자자와 관련한 행정절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북투자자의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이 재정부와 통일부에 보고하도록 했던 대북투자자의 연간 사업실적, 결산보고서, 대부원리금 회수보고서 등을 수출입은행에 제출하도록 했다.

수출 '퇴짜식품' 국내선 유통

발암물질 검출... 2005년 이후 11건 달해

해외로 수출된 국산 과자에서 강력한 발암물질이 검출돼 전량 폐기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그러나 이 제품은 국내에서 아무런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채 널리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2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한국산 수출식품의 해외 위반내역'에 따른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수출식품이 해외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모두 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수출국가별 부적합 판정건수는 중국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과 유럽연합(EU) 각 1건이었다. 주요 위반내역은 ▲중국 수출김치와 고추장에서의 기생충알 검출 ▲중국 수출김에서 기준치의 3~202배에 이르는 세균과 2배가 넘는 비소 검출 ▲중국 수출과자에서 기준치의 34~52배 높은 세균 검출 ▲중국 수출 멸치액젓에서의 비소 검출 ▲EU 수출 라면의 방사선 조사처리 표시 누락 등이었다.

특히 국내에서도 널리 유통되는 A회사의 과자 '몽콩강정'은 일본 통관 당시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 10ppb를 초과하는 14ppb가 검출돼 제품 전량이 폐기조치 됐다. 아플라톡신은 곡류에 생기는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의 일종으로, 미량만 섭취하더라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소득상위 1%, 종소세 42% 납부

종합소득 상위 1%가 종합소득세의 42%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오재세(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귀속 종합소득 2억원 이상 신고인원은 2만 2천871명으로 전체 종합소득 신고인원 227만9천497명의 1.0%를 차지했다.

이들이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3조1천528억6천600만원으로 전체 종합소득세 7조4천371억9천200만원의 42.4%에 달했고 이들의 종합소득은 12조4천213억4천700만원으로 종소세 전체 신고자의 종합소득 54조1천33억1천400만원 중 23.0%였다. 또 종합소득 1억원 이상 신고인원은 7만6천645명으로 전체의 3.4%였고 이들이 납부한 종소세는 4조6천310억원으로 전체 종소세의 62.3%를 차지했다.

종합소득 5억원 이상 인원은 5천462명으로 전체의 0.2%였고 이들이 낸 종소세는 1조9천42억3천300만원으로 전체의 25.6%에 달했다.

차도 내년에는 600만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성과급 지급률은 지급기준액 대비 ▲S 등급 180% 이상 ▲A등급 120% ▲B등급 70% 이하 ▲C등급 0% 등으로 평균 100%다.

올해 등급별 지급기준액은 ▲4급 288만원 ▲5급 250만원 ▲6급 214만원 ▲7급 180만원 ▲8급 149만원 ▲9급 125만원이다. 4급의 S등급은 288만원의 180%인 518만원을 성과급으로 받지만 C등급은 전혀 없기 때문에 등급별 최대 격차는 518만원이다. 내년에는 등급별 격차가 더욱 확대된다. 평균 성과급 지급률이 올해 100%에서 내년에는 131%로 31%포인트가 올라가기 때문이다.